

● 수능 응시 기회 박탈, 대학 정보 공시 논란

2005년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 재조정 문제와 대학 정보 공시제 시행 법안의 신중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측 입장이 맞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 파동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비롯됐으나 국회 회기와 일정상의 이유로 연내 실사가 어려울 것으로 짐쳐져 왔다.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이날 심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부정행위자 처벌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있다”며 “수능시험도 교

육과정의 일부인 만큼 교육적인 방식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국가 책임도 상당히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최대 2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수능 문제만큼은 입시제도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부정행위자 처벌 자격을 2년으로 제한하면 가혹하다”며 “이 부분은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보 공시에 따라 대학별 취업률이 발표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사방식”이라며 “한해 동안 갑자기 취업률이 20% 올라가는 등 편법과 조작이 난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로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경제교과서 오류 문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교원평가제 문제도 학습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교과서 질 문제도 제도적으로 유인할 장치가 없다”며 정부가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 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부정을 눈감아 주는 것이 관행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쓰라린 경험을 교훈으로 이런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관행이었던 상황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의무조항을 두고 앞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하도록 노력하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원들이 신중히 처리하면 그러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도 경제교과서 오류와 교과서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우리 교과서가 너무 축약되어 있어 흥미가 제하되고 검정시스템 자체도 질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도를 고쳐도 근 10년 가까이 흐르는 만큼 전자교

과서적 방법을 빨리 도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대학 간접연구비 비율 확대 시급

대학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하려면 간접연구비를 확대하고 연구원 인건비 보상을 현실화해야 하며, 기초연구개발비 증대와 연구시스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진영·이주호 의원원 주축로 지난 2005년 11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경제가 선진 단계로 갈수록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9.9%에 그치고 있는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1% 포인트 낮추고 기초연구비 비중을 1% 포인트 높이면 생산성이 0.07%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0% 개선하면 장기성장률이 0.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 똑같은 R&D 비용의 투입으로도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 제고,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혁신 금융의 정상화 등 장기적 안목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재단 김선일 기초연구 단장은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허위 구입하거나 산업체 대응자금을 대납하는 등 비합리적 집행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합리적 연구비 집행은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합한 제도적 틀 속에서 연구기관의 효율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연구자의 건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체발표한 포항공과대학교 송완홍 연구진흥팀장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상을 현실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계상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관련 규정을 표준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연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출하되, 대학의 회계제도가 정비되면 수입비율 및 활동기준 원가에 의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문 분야간 전공 계열을 줄여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연구역량별로 대학 유형을 글로벌 혁신(연구중심대), 지역혁신(지역거점대학), 지역기반 구축(기술교육대) 등으로 특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 부원장은 “선진화된 연구비 구조는 직접연구비와 인건비, 간접비가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연구비가 많게는 80%까지 차지한다”며 “자체 연구비 관리 능력이 입증된 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간접비를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고등교육연구실장은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구의 중복과 낭비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관리를 위한 투입-과정-산출 단계가 밀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간

접비가 마이너스 개념이 아닌 플러스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산출처리 지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진호 연구부처장은 "교수가 연구비를 따낸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게 현재의 연구관리시스템"이라며 "연구비 횡령시에는 엄중 처벌해 다시는 연구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연구관리가 잘되는 대학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호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몫을 다하려고 한다"며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협력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5학년도 수능 부정

329명 성적 무효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까지 최근 4년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성적이 무효된 수험생은 모두 4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1월 16일 현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성적이 무효화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29명 △2004학년도 102

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도 15명으로 모두 47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시험 이후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실제 답안을 송수신한 경우가 412명, 답안을 송·수신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4명, 대리로 응시한 경우가 6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2~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혐의 대상 수험생 51명 중 성적 무효 결정자는 48명으로 이중 성적 무효 예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9명을 제외한 39명이 무효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9명에 대해 조만간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성적 무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4학년도 부정입학자의 경우 당해 대학에 진학한 89명 가운데 77명의 입학이 취소됐으며,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원 미달 등으로 수능 성적 무효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12명은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많은 대학들이 부정행위의 경우 특별한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2~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 34명 중 상당수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올해부터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별도로 정해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 인생 전체에 과오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취업지원 대학에

최고 3억 5천만 원 지급

2006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는 대학에 대해 1년간 최고 3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5년 11월 24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피보험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 1월 대학들로부터 취업지원 관련 사업계획을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 대학을 설정하고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액은 해당 대학의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대학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005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 3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 대학 증시상장 허용 검토

최근 증시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대학들에 대해서도 증시 상장을 허용하지는 움직임이 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2005년 12월 2일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고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식회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대학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대학 설립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주식회사 대학이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면서 “선진국의 대학 증시상장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 교수들은 “주식회사 대학은 시장 수요의 변화를 잘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회사 대학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며 학교행정도 일반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회사 대학을 허용해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검토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 ‘1도 1국립대’로 통합하자

거점대 중심의 권역별 국립대 대학교 통합을 주장해 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1도 1국립대’ 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지병문 의원 주최로 지난 2005년 11월 30일 사학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권역별 국립대 통합’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한 백종국 경상대 기

획처장은 “전국의 48개 국립대 중 전문대를 제외한 43개 종합대·산업대·교육대를 10개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통합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을 중심으로 권역내 국립대가 통합을 한 후 학생 수와 재정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맞추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더러, 대학별 특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부산권역의 경우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밀양대, 부산교대를 합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대와 비교할 때 교수는 370명, 직원은 214명이 더 많으며, 서울대 학부생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면 15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처장은 권역별 대통합에 반대하는 국립대는 특성화된 분야를 육성하는 공립대로 법인화하고,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는 초급대학을 자치단체들이 자유롭게 설립하게끔 하자고 주장했다.

즉, 국가가 운영하는 권역별 10개 국립대(4년제)는 연구중심과의·치의학, 법, 건축, 교육학 등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며, 광역자

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공립대(2~4년제)는 특성화 분야와 직업교육을,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급대학(2년제)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통합과정의 갈등, 인센티브 부여식 통합유도가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권역별로 국립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처장은 “법인화의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법인화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성표 충남대 기획처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국립대 통·폐합을 보면 재정지원은 유인책이고 특성화 목표인데, 실제로는 재정지원을 바라는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복학과를 양쪽 대학에 두고 운영하는 게 단적인 예로 이래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처장은 “원하는 대학은 못치고, 원치 않은 대학은 공립대로 가지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강력한 법”라며 “1도 1대학이 실현되려면 구조조정

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대도 1도 1국립대를 모델로 공주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대전·충남권의 대학을 아우르는 밀그림을 그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유금록 군산대 교수는 “학교 대학교로 통합하려면 어려운데, 학부(과)나 개인별 교수 이동의 길을 터줘야 한다”며 “중소대학이 갖는 흡수통합에 대한 피해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대통합의 경우 추진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며 “재정 자립이 안되는 도 단위에서 대학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승희 전국국립대교수회연합회장은 “국립대 구조개혁은 구성원이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국교련이 제안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장도 “통합과 정원 감축으로 열악한 국립대 규모를 더

줄이면, 사실상 비인기학문이 퇴출되고 국립대 공공성은 더 후퇴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대학생 2명 이상 가정 학자금 우선 대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2월 9일 두 자녀 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 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시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 산학협력중심대학 내년 2백억 예산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가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R&D

투자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산자부는 2006년도 R&D 투자 규모를 정부 부처 중 최대 규모인 2조 29억 원으로 잡고, 이를 성장 동력과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지역혁신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2005년 12월 14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역간 균형적인 디자인 발전 산업 도모를 위해 각 대학에 설립하고 있는 디자인센터(RDC) 지원사업을 올해 9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80억 원으로 대폭 증액 실시한다. 또 지난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추진했던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도 올해 120억 원에서 80억 증액한 200억 원이 투입된다.

대부분 대학 연구진에게 투자되고 있는 핵심연구·나노 바이오·21세기 프린터 등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중장기 기초원천과제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방식을 개편해 기초·원천 분야의 과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1세기 프린터 사업의 경우 올해 431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49억 원으로 늘렸으며,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은 올해 590억 원에서 2006년에는 1,0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지역혁신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테크노파크(TP), 지역혁신센터(RIC)도 올해와 같이 각각 2백억 원과 489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R&D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로드맵을 통해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분야별 프로젝트매니저(PM) 지정, 경제성 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R&D 과제의 기획 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 기획시 선행 특허 및 표준화동향 조사를 실시해 기술개발의 지적재산권화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료 과제의 성과를 추적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 2006년 이공계 장학금 770억 지원

과학기술부는 2006년에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등 모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770억 원의 장

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05년 12월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입생 4천 명과 재학생 9천 명으로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4년간 매년 7백만 원, 대학원생은 5백만 원씩 2차례 장학금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선정하려면 고등학교 전 학년 내신성적(수학·과학)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하며, 수학·과학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1개 학기 성적 및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2006년 이공계 장학금은 IT(정보기술) 등 전략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위 30%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7개 대학 대상 ‘연구 인건비 풀링제’ 시범 실시

교수연구비 집행에 있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시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사고를 막기 위한 ‘인건비 풀

링제'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 9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건비 풀링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2005년 12월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시범대학 연구실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범부처 평가단의 연구비 관리 개선효과 등의 점검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이들 연구실에 적용할 '인건비 풀링제 시범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학본부에서 연구과제별로 각각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수별로 통합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된다.

이 때 관리하는 중앙관리제를 엄격히 적용하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처가 맡는다. 단과대학과 교수단위에서의 인건비 계정 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건비 계상은 연구계획서 작성시 학생연구원은 실명단위로 기재하지 않고, 박사급·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별로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man-month 총량'으로 계상된다.

지금까지는 연구계획서상 실명으로 연구 참여 학생을 기재하고, 참여율에 따라 학생별 개인 인건비 지급액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해 오고 있다.

인건비 지급 대상도 현재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실명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것을 협약체결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을 구성한 후 실제 연구수행 과정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인건비 지급액도 현행 연구계획서상 참여율에 따라 사전 계상된 인건비만큼 해당 학생에게 지급돼 오던 것을 교수단위에서 참여 정부부처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총액 부분을 풀(pool)로 모

아 별도계정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 때 개별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원의 실제 연구 참여율(개인별 man-month 고려)을 감안해 풀(pool)로 모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관련 공동관리규정을 근거로 배분한다.

연구 참여율은 교수가 실제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합의하에 결정해 연구 참여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이 각 부처 과제 전체에 대해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계획서상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총액으로 계상하며, 총액 범위에서 교수가 학생연구원별로 연구 참여 실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침은 인건비 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시에는 대학본부가 해당 교수 징계 또는 형사고발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협약서상에 명기토록 했다. **대학**